

# 대선정국 3월 지각변동 오나

3월에 접어들면서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검증 공방에 이어 경선룰을 둘러싼 한나라당 후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모임 등에서도 한명숙 총리 등 범 여권 후보군 띄우기에 나서면서 대선고지를 향한 경합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 통합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확산되면서 대선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리는 곳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관도를 가를 수 있는 '경선 룰' 확정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에는 긴장감을 넘어서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경선룰 확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막을 올리는 만큼 판이 짜여지기 전까지 후보간 신경전과 상호견제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 한나라 경선룰 확정... 빅3 분열 여부 분수령 한명숙 대선레이스 가담, 정운찬 영입 경쟁 DJ 범여권 통합·후보 단일화 영향력 행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페어플레이를 공언하고 있지만 승패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경선룰을 놓고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특히 경선방법과 시기에 관한 각 주자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데다 손 전 지사가 현행 경선룰 고수시 '경선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경선룰이 가다 지어지는 3월은 한나라당의 분열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등에서는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한명숙 총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통합신당추진위는 2일 만찬 회동을 갖고 지역·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역할분담을 통해 대선 예비주자군을 좁혀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전 총장의 경우 우리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통합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범여권에서 '추대모임' 구성하는 등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한 총리 역시 6일 이후 당 복귀를

통해 대선경쟁 참여를 공식화하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범 여권 통합과 관련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J의 움직임과 함께 최근 사면복권된 권노갑, 박지원씨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일한 통합정당을 만들거나 최소한 선거연합을 이뤄내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범 여권 통합이 지지부진할 경우, 김 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대선 구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시설

## 광양 경제자유구역 투자여건 풀찌라니

정부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투자여건 미비와 지원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두바이나 상하이 등 아시아권 자유구역은 물론 국내 인천, 부산·진해보다 외자유치 여건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서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중심은커녕 자체 생존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투자기업의 만족도가 경쟁사대인 인천이나 부산·진해보다 떨어지고 구역청 근무 공무원의 외자 유치 성과에 대한 인식도 가장 낮았다. 특히 거주 주민의 32%가 자유구역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입주 외국기업의 75%가 세계 각국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하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광양의 경우는 아직껏 절절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치열한 물류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동의 두바이나 중국 상하이 푸둥, 싱가포르 등은 물류허브를 꿈꾸며 엄청난 정부 지원을 업고 외자유치를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광양권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의미다.

## 봉급생활자 언제까지 '봉' 취급할 건가

봉급생활자들이 올해 근로소득세를 지난해보다 10~46% 더 내야 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적용에 들어간 '간이세액표'를 분석한 결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놓은 것이다.

봉급생활자를 쥐어짜는 정책은 잘못 된 것이다. 정부가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인공이 작년보다 평균 6.0%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소득세를 10~46% 더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선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꾸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월급생활자의 77%가 '마지못해 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방침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도 설득력이 없다.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1년 7조6천766억원에서 2005년

10조3천822억원으로 35% 늘었지만 종합소득세는 3조9천251억원에서 4조6천707억원으로 17.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급'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금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당수 근로자들은 계속된 불황으로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각종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금 부담마저 늘어나면 봉급생활자들의 상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을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특히 월 200만 원 이하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과세부터 강화해 조세의 형평성을 기해야 가야 할 것이다.

## DJ-박근혜 내달 만날까

### 정치권 안팎 회동설 술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손을 잡는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주'로 있는 영남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제기됐던 'DJ-박 연대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4월 중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누구와의 연대 운운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만나자고 한다면 굳이 안만나지지는 않겠지요"라고 여운을 남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계 최강' 국산 차세대전차 첫선 수중 바닥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신개념 차세대전차 XK2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돼 2일 경남 창원시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전차는 특히 4.1m 길이의 물속에서 기동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곧바로 전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83억원. 포탑까지 물 속에서도 완전히 잠기는 전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했으며 기존 K1A1 전차의 120mm 44구경 장포보다 1.3m 가량 더 긴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하고 하늘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자지능탄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 김홍업씨 재보선 출마 관련 한화갑 "내 일처럼 생각 한다"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는 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의 4·25 재·보선 무소속 출마설과 관련, "김씨는 동교동 내에서 가장 친한 후배"라며 "김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한다"고 김씨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세아입니다'에 출연, "김씨는 동교동의 일원이지만 동교동에 누를 끼친다든지,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래서 주변에서 김씨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 출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향과 관련 "동교동에 누가 안되고,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NYT "美, 바그람 테러 위협 알고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지난 27일 폭탄테러로 전사한 고(故) 윤장호(27·다산부대) 하사의 유해가 사건 발생 사흘만인 2일 오전 7시15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군은 오는 5일께 원소속부대인 특전사부대장(葬)으로 영결식을 치른 뒤 윤 하사를

못했다고 밝혀 체니 부통령이 방문 중임에도 양측 정보조직의 협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탈레반이 자신들이 이번 폭탄테러

를 저질렀고 체니 부통령을 목표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콜린스 대령은 "말도 안된다"며 그 시간에 이뤄진 폭탄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故 윤장호 하사 유해

### 대전 현충원 안장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나 가족들의 연기 요구에 따라 7일 장례도 예상된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진 합참의장과 정관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윤 하사의 회생을 예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미국 정부가 연합작전 수행 중 순직한 외국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동성무공훈장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 지방·수도권 일부지역

### 분양가 내역공시 제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도 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교복업체·제약업체

### 공정위, 위법 혐의 포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교복업체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담합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의약품은 그동안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면서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무안 연(蓮)맥주 맛보세요"

(주)다면, 백련차 이용 개발 회산백련지서 시음회 열어

"국내 최초의 연(蓮)맥주를 맛보세요."

무안지역 중소기업 (주)다면은 백련차를 이용한 연맥주를 개발하고 2일 일로회 회산백련지 입구에 시음장 문을 열었다.

연맥주는 즉석제조 맥주로 맥주보리와 백련차 원료의 공통된 특성을 활용해 맥아를 주원료로 홉(Hop)을 첨가해 증차(연잎을 비비고 찌고 튀어 건

조)된 연잎을 사용해 개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처음으로 술을 대하는 고객을 겨냥한 '헬스나 연맥주'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과 호박색의 생맥주로 맥아의 결집로부터 우려 나오는 떫은 성분이 적어 맛이 깨끗하고 백련차의 특성과 어울려 뒤끝이 깨끗하다. 또 남성과 맥주 마니아를 위한 흑맥주는 맥아와 홉, 효모, 연잎 등을 섞어 만든 진한 밤갈색의 생맥주로 알코올 도수 4.5%이며 단맛과 쌉쌀한 맛이 교차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 박광태시장 판공비 2억8천만원

### 박준영지사 판공비 2억9천만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가 각각 2억 8천230만원, 2억 9천405만원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전남 시도가 발표한 '200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비로 각각 1억 5천68만원과 1억 3천162만원을, 박 지사는 1억 2천635만원과 1억 6천77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책정된 예산액 기준으로 박 시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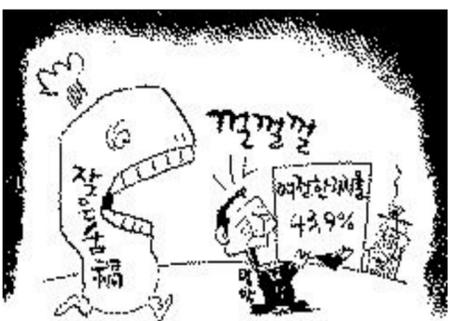
2억 8천700만원의 98.3%, 박 지사는 3억 6천200만원의 81.2%를 집행했다.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기관운영 1억 600만원, 시책추진 2천600만원 등 1억 3천300여만원(99.9%)을 집행했으며 김영복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9천205만 1천원과 8천900만 4천원 등 모두 1억8천105만5천원을 집행(85%)했다.

이명박 광주시 정부부시장은 기관운영 1억 1천180만원, 시책 3천590만원 등 1억 4천77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근경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기관과 시책 추진비로 7천682만원과 6천947만원 등 1억 4천630만원을 사용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그러다 가는 사람 많이 봤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